데스크 탑

최저임금 인상은 재벌개혁과 직결돼 있다

박 원 우
부국장 겸 사회부장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시간제 근로자와 자영업자, 대기업 등 각 경제 주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14일 내년(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재계,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정부주도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체 행동까지 벌이고, 노동자들 역시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 본사격인 대기업들 역시 영업이익률이 거의 반토막 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자신들이 큰 걸림돌이 된 것인양 지목되는 것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이다. 특히 취업난으로 젊은이들 대부분이 시간제 근로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청년들의 복지와 내수경기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주체 · 노동자 모두 불만

사실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부분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친기업 정책을 펴는 보수정권과 친노동자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진보정권이 교차로 들어설때마다 경제정책이 약간씩 바뀌기는 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경기 활성화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는 유독 말들이 많다. 최저임금이 상승하자 영세상인과 대기업 등의 반대가 거세고, 인상폭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노동계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마치 벌집을 들쑤신 것마냥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경제주체의 반발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더디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설정한 공약을 임기내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사실 우리 경제상황에 딱 맞는 처방이라고 볼 수 있다. 엔화의 발권력으로 내수경기를 진작시킨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따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최고의 대안이다.

문제는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편의점 점주를 비롯한 영세상인들이다. 이들의 소득인상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결국 영세상인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뒤늦게 임대료 인상억제 등을 통해 영세상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책의 신뢰도는 이미 추락한 뒤였다.

실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4% 급락했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직군인 자영업에서 현재까지 가장 큰 폭인 12.2%포인트 하락한 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13 지방선거 이후 6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달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기준으로 지지율은 61.1%로 취임 후 최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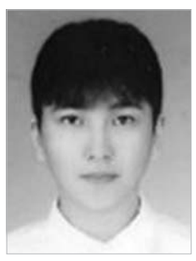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는 영세상인들에 대한 배려가 먼저 있어야 했다. 영세상인들 대부분은 엄청난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빠듯한 이익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동네 슈퍼들은 대기업의 SSM이나 대형 마트에 몰락한 뒤 이젠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인 편의점으로 바뀌었다. 이들 편의점주들 대부분은 대기업이 먼저 이익금을 빼간뒤 나머지 이익금으로 가게 임대료와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가고 있다. 동네 빵집 역시 마찬가지다. 동네 빵집은 예전에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복속됐고 빵집 주인들은 대기업체의 빵 판매자로 전락했다. 골목상권이 대기업에 완전히 장악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정해야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상인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장악한 골목상권부터 되돌려 줘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재벌개혁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분배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부담금이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 고

지역민의 안전, 준법집회 문화가 만든다



백 승 진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집회 현장에는 대규모 집회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생각보다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집회 규모를 떠나 집회 자체의 안전확보 및 교통관리를 위해 많은 경찰력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비교통 부서 외에도 지역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 인력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신의 생존권을 주장할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집회 시위 자체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다. 다만, 인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과격한 집회나 대규모 집회가 발생할 경우 지역민의 24시간을 책임지는 경찰 인력까지 집회 시위 관리에 배치되다보니 실제 민생치안과 관련되는 인력에는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최소한으로 투입될 수 있는 준법집회 시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회시위 건수는 4만 3,127건으로 예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불법폭력시위는 2013년 45건, 14년 35건, 15년 30건, 16년 28건, 17년 12건으로 최근 5년간 최소치를 기록했다.

또한 불구속(고소고발 포함), 불입건(훈방) 등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 인원은 1,828명으로 전년도 4,391명에 비해 58.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준법 및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의지가 크게 작용하고, 이에 맞추어 경찰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으로 집회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전과 다른 집회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사소한 마찰로도 언제든 불법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숙한 집회시위가 정착되기 위해선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의 관심이 보다 더 중요하다.

이에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에도 자율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질서유지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질서유지인이란 집회시위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해 집회시위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사람인데 질서유지인을 둔 경우 행진신고 금지 제한 규정을 다소 완화하는 등, 집회의 자율성을 좀 더 확대해 부여하고 있다.

사실 질서유지인 제도는 지난 1989년 도입 이후 다소 형식적으로 운용돼온 측면이 있는데,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집회 주최측 자율적 활동에만 질서유지를 맡기기 힘들었던 것이 대표적 원인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확산된 상태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인을 적극 활용하고 폴리스라인을 준수하는 등, 폭력행위 없이 질서 있고 성숙한 집회문화를 보여준다면 우리나라의 집회문화는 또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인력 운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선 경찰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의 성숙한 자세가 절실하다.

특히,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과격, 무질서한 집회시위 행태의 반복은 결국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사회적 경제적 손실과 국민의 불편만 초래할 뿐이다. 평화적인 집회시위 즉, 평화적 의사표현만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서 국민과 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집회 시위를 관리한다면 다른 인력들은 자연스레 본래의 임무에 더욱 충실 할 것이며, 그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경찰에서도 집회시위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만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집회시위 대응 방식에 탈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과격·불법·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집회에 대해선 유연하고 탄력적 대응이 절실하다.

앞으로 누군가가 '집회'라는 단어를 접할 때 '경찰과 시위대의 대립'이 연상되는게 아니라 '질서유지인을 통한 자율적 질서유지와 경찰의 집회 보호'를 떠올리는 시대가 반드시 오길 바란다.

이런 분위기가 점차 정착되면 경찰은 더 이상 통제가 아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소통 중심의 관리로 선진화된 집회문화를 이끌어 갈수 있을 것이다.

준법집회 문화의 정착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기 고

"폭염 대비 행동요령 숙지는 필수"

정 대 원
여수소방서 소방행정과장

한반도에 펄펄 끓는 폭염이 기약 없이 지속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 나주·담양·화순·함평 등에 발효된 폭염특보도 20일이 넘도록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일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역대 기록은 지난 1994년으로 당시에는 19일 동안 폭염 특보가 연속으로 발효됐다. 8월에 접어들면 역대 최다기록인 1994년도 45일에 점차 근접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망자수도 작년 5명에서 올해 이미 17명을 넘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비 소식도 없을 것으로 예상돼 무더위 속 건강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발령은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로 나뉘는데 1일 최고 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된다. 1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로 격상된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급장비(얼음조끼·얼음 팩·정제소금, 생리식염수 등) 확보 및 신속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는 열, 경련, 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에는 소금물이나 전해질(이온음료)음료를 마시게 해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환자는 기도를 확보하고 옷을 제거해 체온이 내려갈 수 있도록 차가운 수건으로 손발을 식혀주고 부채질을 해준다. 만약 얼음이 있다면 얼음을 수건에 감싸 환자의 겨드랑이와 무릎, 손목, 발목, 목 부위에 대 체온을 낮춰 주고 환자가 쇼크증상(창백·축축한 피부, 식은땀, 메슥거림·구토, 빠르고 약한 호흡 등)이 나타나는지 관찰하며 119 구급차를 이용해 신속히 병원에 이송해야 한다.

폭염에 대비하는 방법에는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 ▲통풍이 잘되고 가벼운 옷을 입을 것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삼가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며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온도를 적정수준(26~28℃)으로 유지하는 것이 있다.

또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해야 하고 주·정차 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전화 후 응급처치를 하고 개인 위생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제 폭염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해다. 나 또한 폭염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올바른 예방 및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냈으면 한다.

사 설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경제 성장률

경제성장률이 자꾸만 뒷걸음질 치려 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이 0.7%로 찔끔 성장에 그친데다 설비와 건설 등의 투자는 모두 뒷걸음질치며 내수에 힘이 빠졌다. 도대체 탈출구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걱정이 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보면 입맛이 쓰다. 통계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398조원을 겨우 넘겨 전 분기보다 0.7%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부 전망치인 올해 2.9% 성장을 달성하려면 하반기 분기 성장률이 2분기보다 높아야 하는 셈이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2%를 기록한 이후 올해 1분기 1.0%로 늘었다가 다시 쪼그라들었다. 한은은 3·4분기에 전기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 올해 2.9% 성장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대내외적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은 터라 쉽지만은 않을 듯하다.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건설·설비투자가 역성장으로 꺾인 점이 가장 걱정스럽다. 1분기 성장을 주도했던 민간소비가 0.3% 늘어나는데 그친 점이 걸린다. 특히 건설투자 증가율이 1분기 1.8%에서 2분기 -1.3%로 마이너스 전환, 급격히 꺾였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현재 대내외적 경제 환경을 보면 목표했던 2.9%의 성장률 달성이 녹록치만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국내 경제의 기저인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및 건설경기 하락세 전환은 상당히 부담이다. 따라서 경제 둔화세가 고착화 되기 전에 선제적인 전략을 통해서라도 경제 성장세를 유지해야 마땅하다.

농촌 파고드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

최근 불법 외국인노동자들이 전남의 농촌과 농공단지 등에 급속히 파고들고 있다. 특히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빈집 등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이같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니 답답하다.

지난 6월말 기준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광주 3,873명, 전남 3,28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광주는 306명, 전남은 54명 늘어난 수치이다. 하지만 불법으로 취업한 인원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니 불안감이 크다.

불법 노동자들이 농어촌지역 농공단지나 농업 현장에 취직한다는 점이 더욱 문제다. 신분 노출이 비교적 안되고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한 점을 악용한 셈이다. 일부 시·군 지역에선 건설현장의 단순 노무자나 농사인력을 공급해주는 인력 소개소 등에서까지 일한다니 놀랍다.

특히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아예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중 일부는 국적조차 알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이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주민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지만 신원파악 조차 어렵다니 불안하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노동자를 적발할 경우, 즉시 단속을 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를 제대로 파악하기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들 불법 노동자들이 더 이상 사회문제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불법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파악, 적극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광장

노인 운전면허 관리 '선진국처럼'

얼마 전 서울에서 70대 노인이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치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노인은 주의력, 시력, 인지능력, 위기대응능력 등 운전에 필요한 기능이 떨어져 노인 운전자의 음주사고는 사망 등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노인들의 경우 알코올 대사 작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젊은이보다 훨씬 빨리 취한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2% 줄어든 반면, 노인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35%나 치솟았다.

현재 66세 이상 운전자는 250만 명, 택시.버스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으며, 70대 이상 택시기사만 1만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 운전면허를 따면 평생 운전을 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경우 81세 이상은 2년에 한 번 시력검사와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 운전면허가 갱신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사고 경험이 있는 70세 이상 노인의 운전면허를 특별 관리하고 있다. 빠른 고령화로 노인 운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노인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건 차별이 아니다.

노인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개선은 노인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풍양파출소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사장·발행·편집인 金善男 상무이사 겸 편집국장 李斗憲 논설실장 丁正龍
대표전화(062)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기사 제보 (062)720-1050~56
F A X (062)720-1080~82
논 설 실 (062)720-1032
정 치 부 (062)720-1060~62
경 제 부 (062)720-1066~67
사 회 부 (062)720-1050~53
사회2부 (062)720-1043~44
문 화 부 (062)720-1071~72
전 산 팀 (062)720-1033
사 진 부 (062)720-1040
광 고 국 (062)720-1017
인쇄처 다원 인쇄
기사제보 jndn@chol.com
광고문의 720-10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생활정보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3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39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232-3117

긴급전화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수도 고장신고	121
▲전기고장 신고	123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전남대병원	220-6900
▲ 조선대병원	220-3114